「지역개발연구」 60집 발간을 기념하는 대표적 지역연구논문

지역개발연구소는 1969년 3월『지역개발연구』 제1권 제1호를 발행한 이후 2013년 6월에 통권 제60집을 발행하였다. 이에『지역개발연구』 제60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44년간 발행된 총 4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대표적 지역연구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으로 ① 지역개발에 직접 관련된 논문, ② 우리나라 전체 지역개발에 관련된 논문, ③ 광주·전남 지역개발 관련논문, ④ 지역개발의 이론과 사례의 조화 추진, ⑤ 가능한 한 중복 분야를 배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 ⑥ 지역개발분야 학문발전과 광주·전남의 미래 지역개발에 기여 가능성 등을 정하였다. 선정방법은 선정기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선정논문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전체 지역개발에 관련된 논문 혹은 광주·전남 지역개발에 관련된 논문을 전체 논문의 10% 수준인 총 44편 선정하였다. 특히, 출간당시의 현황분석이나 지역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보다는 지역개발에 대한 통찰과 주관을 제안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선정된 총 44편의 논문 중에서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중복 분야와 동일 저자를 배제하고 향후 광주·전남의 지역개발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학술적 논문을 총 27편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기존에 발간한 지역개발연구소 기획도서의 주제와 중복되는 논문 및 2000년대 이후의 최근 논문을 제외하여 대표적 지역연구의 학술적 가치 외에 고전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논문을 최종적으로 총 12편 선정하였다.

『지역개발연구』 제60집 발간을 기념하여 선정된 총 12편의 논문이 지역연구의 고전이 되어 향후 광주·전남의 지역개발분야에 더욱 풍성한 후속연구를 양산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6. 30

송인성 논문선정위원장
나주몽 지역개발연구 편집위원장
이상호 지역개발연구소장

「지역개발연구」 제60집 발간을 기념하여 선정된 대표적 지역연구논문 12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근대화와 지역개발의 과제**	고승제	제2권 제1호 (통권 제5집) 1970, pp. 91-103.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날 지역개발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기될 지역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주제발표형태의 논문임. 토론 내용 또한 매우 값진 내용임.		
2	**호남지역 구조적 정체성의 요인분석**	민준식	제3권 제1호 (통권 제6집), 1971, pp. 1-21.
	호남의 1971년 현재 정체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체성 극복의 노력이 이루어졌더라면 호남의 오늘은 훨씬 좋아졌을 것임.		
3	**농촌근대화를 위한 정책모델**	이광우	제5권 제1호 (통권 제8집), 1973, pp. 35-56.
	전남이 봉착할 농촌문제를 "村·小·勞·政"의 특이한 접근방법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4	**한국어업공동체에 관한 연구** **– 성립과 전개형태를 중심으로 –**	박광순	제6권 제2호 (통권 제9집), 1974, pp. 121-227.
	한국 어업공동체의 발전형태에 관한 이론을 제안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함.		
5	**도서지방에 있어서의 농수산업 개발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 **– 전남의 주요도서를 중심으로 –**	조재육	제8권 제1호 (통권 제12집), 1976, pp. 77-95.
	전남 발전의 중요한 공간인 도서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6	**수도권 인구분산과 전남지역개발전략**	이정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3집), 1977, pp. 117-128.
	우리나라 지역문제의 근간인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우려 속에 전남의 대응방안을 지역내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음.		
7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	정학신 외9	제14권 제1호 (통권 제18집), 1982, pp. 83-17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부가 시행한 "광주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초기 논문임.		
8	**도시계획과정별 시민참여수단에 관한 연구**	정환용	제15권 제1호 (통권 제19집), 1983, pp. 73-96.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발생하는 국토공간의 변화과정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하였음.		
9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개발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송인성	제20권 제1호 (통권 제24집), 1988, pp. 1-51.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연안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문제를 다룬 최초 논문임.		
10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김영용 서종석	제21권 제1호 (통권 제25집), 1989, pp. 279-297.
	지역문제의 핵심인 소득격차 분석에 대한 경제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함.		
11	**국제화시대의 농촌현실과 농촌전략의 선택**	최양부	제24권 제1호 (통권 제28집), 1992, pp. 147-166.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농촌이 봉착할 문제와 선택방향을 판단하여 주요 농업지역인 전남의 발전에 중요한 제안을 제시함.		
12	**광주·전남지역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제언**	손용엽	제32권 제1호 (통권 제36집), 2000, pp. 111-129.
	광주·전남의 지역경제개발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한국의 근대화와 지역개발의 과제*

고 승 제

2차 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진국개발이론이 도출되고 수정되고 재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후진국개발이론의 난무가 세계학계의 동향이다. 후진국개발이론을 나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의 것은 경제성장은 균형이 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넉시(Nurkse, R.)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균형성장이론이다. 다른 하나의 진영은 균형 있는 경제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히긴스(Higgins, B), 허쉬만(Hirschman, A. O.) 등의 불균형성장이론(Unbalanced growth theory)이다.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는 민간중심이냐 정부중심이냐로 나타나지만 이 두 가지 진영의 이론은 그것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잡다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주석이 더 필요하다. 첫째는 자본형성에 있어서의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과의 균형여하, 둘째로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와의 균형 여하, 즉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는 자본, 기술, 운송(transportation), 통신(communication) 등인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제도, 가치관 등 비경제적 요소(non economic factor)가 있는데 이 양자의 관계가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여부를 생각할 수 있다.

1963년에 발표한 1963～1967년까지의 터키의 제1차 5개년계획서에서 지역개발정책의 3대명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투자를 할 때 가지각색의 요소(factor)를 고려해야 할 것이지마는 가장 중요한 고려 점은 지역 간 개발(inter-regional development)이라는 명제이고, 둘째는 마치 불균형성장이론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선할당(priority allocation)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생산(Over-all productivity)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Italy)가 부유한 공업지대의 북부와 가난한 농업지대인 남부와의 지역적 발전격차를 어떻게 해소했는가를 통해 지역개발로서 경제성장이론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evidence)를 찾아 낼 수 있다.

다음의 논의는 도시화와 지역개발이다. 일부 사회학자 또는 경제학자들은 현대화(modernization)와 도시화(urbanization)를 같은 정책명제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할 수 없기도 한다. 도시화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마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전개돼야 할 도시화의 궁극적 지향점은 농촌의 구제자, 농촌근대화의 유력한 촉진자에 있다.

우리는 흔히 향토애에 있어서는 으뜸가는 국민이다. 이 향토애라는 잠재력(potentiality)를 지역사회에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전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전통과 경제발전의 목적이다.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향토의식은 중요하고도 남음이 있는 발전의 잠재력이다.

* 지역개발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5집) 1970, pp. 91-103.

호남지역의 구조적 정체성의 요인분석*

민 준 식

191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빈곤지대 또는 구조적인 정체지대로 전락하였다 L.H. Klaassen의 지역구조격차의 4가지 분류기준에서 볼 때 제4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료를 통하여 호남지방의 과거의 모습을 사상면, 문화면 및 경제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여러 지역경제권역에 있어서 호남지역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 구조적 정체성을 주체적, 객체적 및 사회적 조건의 3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구명해 보려고 한다.

호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경제발전의 기초적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미성숙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구조적 정체성의 근본요인이다. 개발의 주체적 조건의 불비, 객체적 조건의 미성숙, 제도적 조건의 결여로 "준인습형 정체 경제의 단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고질적 침체로 개발의 임펙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의식수준이 비교적 높고 감수성과 감각이 매우 예민한 곳이어서 타지역의 개발의 물결과 소득성장은 이 지역에 현대적인 수비감각만을 자극시키고 부풍과 허화의 생활패턴만을 조성하고 있으며, 물적 생산의 기반이 없고 저소득지대인 이 고장에 비생산적인 오락시설과 고층건물만이 용립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개발지역으로부터 이차적인 역류효과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호남경제와 같은 만성적인 정체구조에 투자의 임펙트를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량이 임계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형성의 악순환과정으로부터 탈피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기간산업이나 개발전략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집중투자의 투입으로 만성적인 정태적 체질에 Impact와 disturbing factor를 자극함으로써 비로소 개발의 기동을 일으킬 수 있고 동태적인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질적 침체속에서도 호남지역은 우수한 산세에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고 서남해에 무수한 도서와 수산의 보고를 안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에 온유하고 슬기로운 혜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개발의 기초적 조건의 불비때문에 사회경제발전의 각광을 받지 못한 채 빈곤과 정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구조혁신을 위해 기초적 조건의 점진적인 성숙만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회경제체내의 내생적 및 자생적 요인보다도 외생적인 Impact와 Big Push만이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개발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6집), 1971, pp. 1-21.

농촌근대화를 위한 정책모델*

- 「촌·소·노·정」식 공업화 -

이 광 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는 아마 절대다수의 인구를 포옹하고 있는 농촌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후진국 정부들은 선진 제국이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해결해 온 거의 모든 문제들에 한꺼번에 당면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 내에서도 농촌은 농업의 구조적 전근대성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있는 하위사회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국이면서도 원료 농산물의 제공은커녕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근대화 내지 농촌근대화는 비단 농민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절대적 명제로 인식되어진다. 농업부문이 더 이상 정체하거나 낙후한 체 방치된다면, 그것은 곧 공업부문을 비롯한 여타 제부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제약하리라는 것은 명확히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논자는 먼저 근대화의 일반적 정향과 농촌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농촌개발의 긴요성을 고찰한 다음, 농촌근대화의 정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건들을 추출함으로써 후진국 농촌근대화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나서, 한국 농업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면서 그 기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겠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농촌문제를 구라파 성장사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농촌들은 (1) 토지확대의 여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인구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것, (3) 경쟁상대방에 대하여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4) 경제활동의 분화가 미진하여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같은 후진 약소국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이 공업화를 위한 대충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것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중시장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소외된 농민을 참여시킴으로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득의 보다 더 균등한 분배가 도덕적 이유 때문에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유익한 것이다. 저개발 제국에 있어서 보다 더 균등한 소득 분배는 농업의 혁명적 개혁에 의해서만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국과 같은 약소 후진국가의 농촌근대화에 적용될 가장 합리적인 개발 모델은, (1) 농촌기초식(Rural based), (2) 소규모식(Small scale), (3) 노동집약식(Labour intensive), (4) 정부지원식(Government supported)의 공업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논자는 "「촌・소・노・정」식 공업화 모델"(R－S－L－G Industrialization model)이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 지역개발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8집), 1973, pp. 35-56.

한국어업공동체에 관한 연구*

- 성립과 발전형태를 중심으로 -

박 광 순

한국 어업 및 어촌의 구조적 특징은 낙후성과 전근대성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어업공동체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있어서 어업의 종류, 어촌의 입지, 어민의 의식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어업공동체의 유형을 나누고 발전논리를 재촉하여 한국 어업공동체의 발전형태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한민족의 수계개발은 한민족의 한반도 정착과 함께 추진되었으나, 최근의 어업은 어업기술의 저위로 자연에 생육번무하는 어구조류의 채구 위주였다. 따라서 당시 어업은 공동노동에 기반한 공동경영의 형태로 영위되었을 것이며, 독립되지 못한 채 농업공동체의 재생산과정에 매몰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성립된 한국의 어업공동체는 공동체의 발전형태 중 마지막 형태인 게르만적 형태의 공동체에 해당되며, 같은 발전단계 내에서도 유형의 차를 보인다. 어업공동체의 제1유형은 흑산도의 미역공동채조제에서 볼 수 있다. 경영은 완전한 공동체규제에 의해서 규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게르만적 공동체의 원형으로 자본투자는 채취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러한 공동체는 현존 수산업법의 제1종 공동어업권이 뒷받침하고 있다. 제2형태는 해태를 중심으로 한 양식업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그 특징은 제1유형과 동일하나 경영형태가 다르다. 제1형태는 생산물이 분배되는데 반하여 제2유형은 양식장(어장) 자체가 직접 배분된다. 이것은 양식어업이 채취어업에 비교하여 경작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3형태는 연안의 망어업에서 보여진다. 연안의 망어업이지만 거기에는 정식어업권어업과 제2종 공동어업권어업 및 제3종 공동어업권어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어촌의 공동체는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두 요소를 축으로 하여 성립된다. 첫째, 한 편에 생산수단의 전체에 의한 총유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전체의 구성요소인 개별가구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유만으로는 충분한 독립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전체가 개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촌에 아직 어촌공동체가 존속하고, 그것이 강인하게 기능할 수 있는 요인은 어업 내부에서 산업혁명이 완료되지 못한 점과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해 이전의 소상품 생산적 영세 어가가 할거하게 한다면 어업 외부(2, 3차산업)에 있어서의 산업혁명의 미완료는 이들 상대적 과잉인구를 흡수하지 못하여 자연히 연안의 전용어장에 모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근대화 작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들 어업공동체는 어떻게 의존하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근대화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근대화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든 우리의 어업공동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고 어촌에 있어서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모든 면에 걸쳐 생활유기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지역개발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9집), 1974, pp. 121-227.

도서지방에 있어서 농수산업개발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

- 전남의 주요도서를 중심으로 -

조 재 육

한국에 있는 전체 도서의 65%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남의 자연적 특수성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전남은 총인구 중에서 도서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3.6%이며 그 중에서 신안, 진도, 완도 3개 도서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약 75%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전남에 포함된 서남해안의 주요도서를 색출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산업을 분석하고 개발의 잠재력을 검출하여 도서종합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서는 주변해양을 포함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할 새로운 영토이며 그의 개발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모든 학문과 지식이 집중해야 할 새로운 프론티어이다. 특히, 해저자원의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기지의 건설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적합한 생활공간으로서 도서개발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토공간확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인구는 조밀하며 이민정책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에 반도의 서남해안에 발달된 넓은 간석지와 대륙붕이 갖는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역사적 과업이다.

전남 도서경제의 기초는 농업과 수산업이다. 대표적인 신안・진도・완도 등 3개 도서의 경제적 기초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안・진도는 주농종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완도는 주어종농업 특성을 가진다. 어로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위 전업농가구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완도는 8.8%에 불과하며, 다른 두 개의 도서지역에 비하여 어로업 위주가 아니고 오히려 양식업위주의 어가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도의 고구마 생산량의 일부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며, 가축사육의 가능신안・진도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권장할만하다. 도서미곡생산은 경작지의 절대적 유한성과 관개시설의 미비로 크게 저해받고 있으며 저수지 확충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어선동력화와 어획고와의 관계의 경우 진도와 완도의 어가당 동력선톤수를 전남평균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어선동력화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금융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신안군에는 백합양식과 새우양식을 위주로 개발하며 굴양식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진도는 미역과 천초 그리고 굴을, 그리고 완도는 해태・미역・바지락・천초 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수면 양식업에 있어서 개발의 잠재력은 진도가 가장 크며, 군내・고군・의신・임회면에 풍부한 어족이 서식하고 있다. 수자원은 진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으나 수리안전답율은 전남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신안군의 수리안전율은 최하위로서 갈수기에는 농업용수는 고사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원개발이 시급하다.

* 지역개발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2집), 1976, pp. 77-95.

x

수도권 인구분산과 전남지역개발전략*

이 정 구

현재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은 입지집적 누적성 때문에 산업과 인구가 과밀하게 밀집되어 여러 가지 과밀집중의 폐해가 날로 심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하나의 집적은 다른 집중을 유발한다는 누적성 때문에 서울은 점점 과대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즉 수도권에 생산요소의 집적구성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편재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주택난, 용수부족, 용지부족, 지가의 앙등, 인구의 과밀 및 산업공해 등 과밀집중의 피해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전남지역개발의 전략"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수도권 과밀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분산은 매우 중요하며,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과잉인구를 지역에로 역류시키고 지역인구의 수도권집중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제도적인 통제조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지역개발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심한 격차를 제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전남지역개발을 위한 3가지 거시적 지역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역공간이용의 체계를 확립하고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농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육성과 공업단지개발과 확충을 통한 공업화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인구이동의 특징은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직결로서 이 때문에 대도시의 인구는 시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나 이에 맞추어 대도시의 흡수능력이 미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각종 누적의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이란 자연적 현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지역개발의 의의는 또한 인구이동을 농촌으로부터 지역중소도시로, 다음에 대도시로, 그리고 수위도시로의 점진적 다단계 이동 형태로 전환시켜 줌으로서 수위도시인 서울의 인구팽창에 다소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여 서울의 집적효과와 인구증가간에 마찰없는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지역개발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3집), 1977, pp. 117-128.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

정학신 · 조재육 · 이정구 · 전태갑 · 김영수 · 김종재 · 정환용 · 송인성 · 김영기 · 이성웅

본 연구는 1972년부터 1981년 사이에 전라남도의 행정구역공간에서 이루어진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혼돈스럽게 사용한 지역개발의 개념을 정립하여보고 이에 따라 상기 기간 동안의 전남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을 정리하였고 이들 중에서 광주권지역개발 제1단계사업, 영산강유역종합개발 제1단계사업, 여천공업단지 및 그 배후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남지역에 미치는 각종 개발효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분석과정에서 얻어진 지역개발사업시행상의 문제점과 개발효과분석의 연구상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고 지역에 산업들의 지역 내 산업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기업소득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돌릴 수 있는 조세제도의 도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설계, 집행의 전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한다. (3) 개발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종합성의 결여에서 오는 자원의 낭비, 개발효과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이다. (4) 예산의 낭비,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줄이기 위한 지역개발사업들의 정확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5)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6) 각종사업들의 목표와 목적들이 위계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 효과분석에 있어서도 추상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들의 목표나 목적들은 수리적 지표까지 분화되어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확한 타당성 분석, 효과분석, 목표달성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또 아직도 진행중인 전남지역에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은 공사의 공정달성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의 효과의 달성여부도 정확히 분석 파악되어져야 함을 인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지역산업발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된 발전이라는 지역개발정책목표가 달성되어야겠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측면에 있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은 국가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저해요인임이 우리사회의 각 부문에 우선적으로 인식 · 이해가 이루어져야겠다.

* 지역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제18집), 1982, pp. 83-171.

도시계획과정별 시민참여수단에 관한 연구*

정 환 용

70년대에 들어서서 계획에서는 시민참여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증대되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 재개발, 공해시설의 입지, 교통망개발업과 같은 도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보다 광범한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빈곤, 교육,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압력은 철학적이며 실용적인 고려사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민참여란 말을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어쨌든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누가 시민이며,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며 참여의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의미는 약간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정부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계획이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정부의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지지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라는 의미이다.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근린기저의 계획에 근린참여의 개념을 결합한 계획에서 연유된다. 이러한 근린참여계획(Neighborhood participation Planning)은 60년대에 들어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서비스를 제공시킬려는 노력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했고, 팽대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정부가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에 기저한 해결책 강구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등장된 것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확대, 개발없이는 도시위기의 해결에 성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참여는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계획이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정부의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계획안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정보교환, 교육, 지지구축, 의사결정보완, 그리고 대표적 투입이라는 5개의 일반목표를 갖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가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이후 참여를 통해 도시서비스의 제공수준을 향상시키고, 팽대한 도시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서 근린지역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참여계획의 대두에서 부터이다. 이러한 시민참여계획의 이론적 기저는 계획에 대한 적법성의 형태가 합리성에서 합의성으로, 이것이 다시 참여에로 바뀌어져 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시민참여의 확대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목표설정과 계획안선택과정에서 선별 제한된 시민참여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제19집), 1983, pp. 73-96.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개발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송 인 성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소위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토의 공간형태를 바꾸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사실, 수출주도형 성장위주의 이 개발정책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부분인 산과 바다에 대하여 관심을 등한하게 만들었다. 산림은 비경제림으로 녹화만 추진하였고 바다와 연안은 사려 부족한 개발로 오염되고 생태계는 급격히 파괴되고 말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성장에 장애요인같이 인식되었던 산과 바다를 풍성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의 많은 부분이 살고 있는 연안지역의 자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개발, 관리되기 위한 거시적, 정책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에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 첫째, 연안지역의 개념과 연안지역자원의 의미를 명확화 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출발의 기틀을 제공하고, 둘째, 정의된 연안지역의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파악, 제시하며, 셋째, 이미 연안지역 개발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여러 나라의 정책과 개발 및 관리방법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원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넷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안지역개발 및 관리전략을 거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선진국들은 연안지역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두며, 연안지역을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나라가 종합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안지역관리의 기본법이 될 수 있는 가칭 "연안지역관리법"을 제정하여 이 법을 바탕으로 연안지역개발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겠다.

연안지역 및 해양자원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연자원인 바, 이 자원 활용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할 때 한국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안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

* 지역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24집), 1988, pp. 1-51.

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김 영 용 · 서 종 석

1960년대 초부터 6차에 걸쳐 수행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우리의 경제성장정책이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토를 경제성장 과실의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으로 양분화시켰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비수혜지역의 주민들은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의 경제, 사회환경과 맞물려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성장우선론자들은 효율성을 강조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여기에서 얻은 집적이익을 성장부진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역별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제성장전략은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균형성장론자들은 지역 간의 불균형성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성장이 부진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적제어모형을 통하여 계획당국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면서 성장하려는 목표를 설정할 때 투자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하여 규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 간의 최적투자배분율을 구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최적제어모형은 기존의 Rahman-Intrilligator-Takayama 모형의 변형으로서,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더 적용가능성이 높은 투자배분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도출되는 기본적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 지역에 대한 일정한 투자액의 한계효용의 차와 소득격차로 인한 비효용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한 특정지역에 모든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둘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을 양 지역에 적절히 배분하여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모형의 비선형, 비동차 미분방정식을 분석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 수치분석을 행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국이 형평성을 더 크게 고려하면 저소득지역에 대한 투자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2) 지역 간 소득격차 역시 형평성을 더 크게 고려하였을 경우 더 작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균형성장론자들이 그동안 직관적으로 주장해왔던 논거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계획기간중의 마지막 연도에 어떠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최종시점에서의 소득격차에 대한 제약이 부과되면 투자배분비율의 최적 경로는 사뭇 달리질 것이다. 또한 수치분석에서 사용한 Steepest Descent Method에 페널티 함수를 부가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Gradient Projection 알고리즘 등과 같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최적투자배분 파라미터의 수치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

* 지역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25집), 1989, pp. 279-297.

국제화시대의 농촌현실과 농촌전략의 선택*

최 양 부

20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제화”, “국제화시대”라는 단어는 일상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관점에서 “국제화”, “국제화시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업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국제화를 우리의 농산품시장의 “개방화” 또는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과연 농업・농촌・농민의 관점에서 국제화란 개방화, 자유화만을 의미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말인가?

이에 본 논문은 농업・농촌・농민의 관점에서 국제화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국제화가 우리 농업・농촌・농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진단하고, 국제화시대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의 선택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앞으로 진행될 지방화와 관련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농촌전략의 선택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고도산업・정보사회, 국제화된 개방경제, 그리고 민주화된 지방자치행정, 건강을 위한 안전식품과 쾌적한 삶을 위한 깨끗한 환경과 같은 기본 전제들과 보호적이고 제한적인 농업자유화의 점진적인 추진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조건들을 감안하는 21세기를 향한 농촌전략의 골격을 목표, 과제, 수단 그리고 추진방법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국제화 그 자체 보다도 국제화에 편승 농업・농촌・농가의 장래를 패배주의적 시각에서 보게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농자기피 내지 포기현상들이 아닌가 우려하여 이러한 패배주의의 극복이야말로 국제화시대의 농촌전략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지역개발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28집), 1992, pp. 147-166.

광주 · 전남지역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제언*

손 용 엽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광주권 개발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했던 지역의 산업구조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택했던 정책자료 대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발행한『지역개발연구』의 전권에 게재된 광주권 개발과 관련한 논문을 주요 자료로 이용하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작성한 보고서, 계획서 등도 참고하였다.

정책시행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단위의 정밀한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대신 단순하게 각 전략이 선정된 배경과 함께 정책 추진 이후에 그것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산업간 비중의 변화로서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으로는 입지상계수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것들이 정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성적인 자료도 같이 이용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현재 시점에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는데 유념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도출해냈다.

정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소재산업이 대부분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제1차금속산업이 그것인데, 산업의 지역연관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광주의 경우에는 아시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그리고 하남공단에 입주한 전자제품기업들에 의해 특화산업이 결정된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여 대기업이 되고 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그 대상산업이 될 만한 식료품 산업은 그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의 전근대성으로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천년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광산업과 생물산업을 선정해 놓았다. 최첨단 정보 바이오 산업기지를 만들어 이 지역의 앞날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 화려하고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10여년이 지난 광주첨단산업기지가 첨단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그것을 예견할 수 있다. 광산업이나 생물산업과 같이 첨단산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유념할 것을 정리해 본다.

먼저 쾌적하고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첨단 관련산업에 속하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광주와 전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토지자원을 생산 및 조립기지로 활용하도록 유인 · 유치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에 의한 자생적 산업단지화는 대기업의 견인과 기존산업의 리노베이트 등의 진전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물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가능하다.

* 지역개발연구 제32권 제1호 (통권 제36집), 2000, pp. 111-129.